

## 원주~강릉 복선전철 8월초 시험운행

원주~강릉 복선전철 시험운행이 8월 초 시작되고 영업시운전이 11월 초 이뤄진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본부장 노병국)는 다투어 공사가 한창인 원주~강릉 복선전철에 대해 오는 8

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열차들 귀도에 올려 모든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시험운행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부는 차질 없는 후속 공정을 위해 10일부터 '신호·통신 시험시운전 전담팀' 운영을

시작했다. 철도 신경당 역할을 하는 신호·통신분야 설비의 안전성을 완벽하게 검증하기 위한 전담팀은 전문가 110여명이 참가해 개통 때까지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확인한다. 특히 원주~강릉 구간에는 4세대 무

선통신기술인 LTE를 철도 환경에 최적화된 국산 LTE-R(LTE based Railway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열차무선설비가 도입된다. 노병국 본부장은 "관련 주체들이 정보를 초고속 무선통신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열차 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유희열기자

### 도의회 추경안 예비 심사

### 경건위,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도, 자금 내부 순환 순기능 강조

강원상품권 관련 예산이 도의회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잇달아 삭감,도가 설득에 나서 예결특위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10일 도경제진흥국 추경안 심사에서 300억원 규모의 비상경제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예산 중 90억원을 삭감했다. 도내 청년 2만9900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1만8900명)에 1인당 월 30만원씩, 취업성공(1만1000명)시 해당기업에 월 15만~50만원씩 3개월을 특별지원하되 강원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최명서(영월·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년 일자리 지원은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과연 맞느냐"면서 적절성을 따졌다. 경제건설위는 삭감을 결정하면서 "예산을 도비 70%,시·

군비 30%로 매칭하고 집행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오원종 도경제진흥국장은 "강원상품권은 역외유출을 막아 도가 투자한 예산이 지역내부에서 순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년일자리에 투자되는 상품권의 경우 숙박비나 도서구입비 등 지원항목이 결정돼 있는데 이런 비용을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경건위는 앞서 지난 7일 글로벌투자통상국 추경안에서도 강원상품권 운용계획에 포함돼 있는 '강원상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예산'을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상표등록 비용 지원예산' 30억원 중 9억원을 각각 깎았다. 도는 예결특위에서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계속 설득할 방침이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총무행정관실 추경심사에서 올림픽 홍보효과가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로 제23회 강원도민의날 경축행사 개최 예산 6억 1400만원을 깎는 등 7억 2900만 원을 삭감했다. 김여진

# BTL 보증수수료도 '부대비' 인정되나

건협-신보, 민자사업 발전 MOU  
기재부에 부대비 포함 여부 질의  
유권해석 이끌어내도록 공동노력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수료도 '부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황록)은 10일 민간투자사업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심화되면서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국내 SOC 투자 예산도 감축 기조로 전환되는 등 국내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협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민간자금을 활용한 경기 활성화야말로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도 부족한 예산에도 경기 활성화 필요성에 주목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왼쪽)과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0일 민간투자사업 발전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협회와 기금은 앞으로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협력, 민간투자사업 발굴·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 제공, 회원사의 민자사업 진출에 대한 금융컨설팅 등에 있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주무관청에서 BTL 실시협약 때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수료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 부대비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건협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활용하면 민자사업의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자금조달도 한결 쉬워진다”

며 “반면 현행 부대비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BTL 보증수수료를 총사업비에서 빼는 사례가 많아 업체들이 보증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기획재정부에 산업기반 신용보증수수료의 부대비 포함 여부를 질의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유권해석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건협 관계자는 “민자사업 금융업무에 강점을 갖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보증 문제 등을 포함해 선제적으로 민간투자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